

‘관리 사각’ 광주외국인학교 잇단 마약 추문

설립자 겸 이사장 로버트 할리 필로폰 투약 혐의 체포

지난해 외국인교사 대마 반입 구속...성범죄 수배자 직원 채용 물의도 시교육청 감사 5년전 실시...간부회의서 “담당부서 어디냐” 옥신각신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교사가 1년 새 잇따라 마약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월 이 학교 미국인 교사가 국제 특급 우편으로 2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인 방송인 ‘로버트 할리’ (61·한국명 하일)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관할청인 광주시교육청이 9일 부라부라 학교 현장 지도점검 방침을 내렸지만, 현행법령에서 정한 교원 임면 보고조차 그동안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오승현 부교육감 주재 간부 회의에선 “(외국인 학교) 담당부서가 대체 어디냐”며 간부들간 옥신각신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광주외국인학교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설립자 겸 이사장인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전격 체포된데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부정 입학자 존재 여부 등 입학관리, 학사운영 공시업무 준수 여부 등 교육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가 대량의 대마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퇴직 처리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의 임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사장 마약 범죄 혐의에 따라 긴급하게 지도점검을 나

선 것으로, 지난해 외국인 교사 마약류 반입 관련한 면직처리 건은 학교 측이 별도로 보고해오지 않아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국제 수배 중인 성추행 용의자가 광주외국인학교에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학교 측과 함께 시교육청의 부실 감독 논란이 일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학교 교원 임면의 경우 임면권자가 7일 이내 관할 교육청에 임면 사실과 함께 교원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에 제약이 있다며 사실상 학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재정 결함 보조금 등 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교육청 교육·행정 부서는 “1년 1회 실태점검 및 조사는 실시하나, 관련법상 관리감독 기능에 제약이 많아 감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감사 부서는 “5년 전 감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입학관리, 회계 분량 등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감사가 가능하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광주외국인학교는 지난 2000년 8월 유·초·중·고 과정, 14개 과목 350명 정원으로 광주시교육청에게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내국인 14명, 외국인 27명이 재학 중이다. 교원은 16명으로 내국인 1명, 외국인 15명이다. 학력인정은 되지 않으나 외국어 교



마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씨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육·외국 학교 진학 등 강점이 있고, 학비는 연간 1000만원을 웃돈다.

이 학교는 인가 전 4년간 북구 양산동에 자리를 잡았으나 외국인 투자자·과학자 등 유치할 위해 신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

라 연구기관이 들어선 첨단지구(북구 오룡동)로 옮겼다. 신축 이전 당시 사업비 86억원 중 국비와 광주시 예산 21억 5000만원 씩 투입됐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해남 삼거리서 차량 충돌사고 6명 중경상

해남군 삼산면 한 삼거리에서 2중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9일 해남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해남군 삼산면 삼거리에서 직진 중이던 1t 트럭 차량 뒷부분을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가게 된 포터 차량은 마주 오던 또 다른 SUV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운전자 김모(70)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차 사고가 난 SUV 차량들에 타고 있던 유모(71)씨 등 5명도 가슴과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허가증 변경신고 않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해양경찰이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42.5km(어업협정선 내측 92.6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06t, 승선원 9명)와 B호(106t, 승선원 9명)는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기체번호·출고일자·톤수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신고서를 중국에 신고 후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A호와 B호는 지난 2018년 4월께 연진을 교체해 톤수와 마력 등을 상향시켰는데도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4대 보험료 횡령 혐의’ 사설 노인복지시설장 고발

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가 광주시 남구의 한 사설 노인복지시설장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했다며 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광주지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A시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해당 시설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 2명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실제 공제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연차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확인된 횡령액은 총 70여만원 수준이지만 다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같은 일이 만연하고 있다고 광주지부는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장기요양기관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까닭에 횡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제계약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요양보험료 80~85%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여러 가지 꼼수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생계에 영향을 주는 횡령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노인복지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민중항쟁 참가 전남대생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던 전남대 학생이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에 처해졌다가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980년 12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 계엄보통근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남대 법학과에 재학중이던 1980년 5월 14일 오후 학교 정문에서 다른

학생 8000여 명과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에서 출발해 급남로를 거쳐 전남도청까지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교사 계엄보통근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의 행위가 현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체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현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현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현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여수산단 LG공장 작업 중 화재 인명피해 없어...20분만에 진화

지난 8일 밤 9시45분께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LG화학공장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신고를 받은 여수소방은 소방관 60명과 장비 25대를 현장에 보내 이날 밤 10시55분께 화재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PVC를 만드는 작업 중 배관 보온재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로 배관 3㎡가 그을리는 등 소방추산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빛투 논란’ 마이크로닷 부모 20년만에 귀국 경찰서행

○·연예인 가족의 채무 상환을 촉구하는 ‘빛투’ 논란의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인 신모(61)씨 부부가 20년 만에 귀국해 경찰서행.

○·9일 충북 제천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뉴질랜드 항공편으로 입국했으며,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 체포조에 붙잡혀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는 것.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척과 이웃 등 10여명에게 6억원 상당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 연예인인 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한 것으로 해석. /연합뉴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방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